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洪錫律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1920년대 임시정부 관련
서술 분석

2008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朴 珠 慧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1920년대 임시정부 관련
서술 분석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朴珠慧

認 准 書

朴珠慧의 碩士學位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1920년대 임시정부 관련 교과서 서술내용 비교	4
1. 임시정부 수립과정과 통합 운동	6
2. 국민대표회의와 민족유일당 운동	10
III.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5
1. 상해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15
2. 국민대표회의의 결렬과 민족유일당운동	20
IV. 결론	27

참 고 문 헌

ABSTRACT(영문초록)

논 문 개 요

임시 정부는 3·1운동을 기폭제로 하여 독립운동의 대표 기구를 만들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임시정부를 독립된 한 단원에 서술함으로써 독립운동단체들 중 가장 많은 서술 분량을 할당하고 있다.

임시정부사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19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학계에서는 이전의 일방향적인 임정 정통론 시각에서 벗어나는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러한 연구는 교과서 서술에도 반영되어서, 4차 교육과정 이후 국사 교과서에서는 임정 정통론을 고수하는 이전의 서술방식이 차츰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독립운동을 임시정부 위주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7차 교육과정 검정 한국 근·현대사 서술 방식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현행 근현대사 교과서들 역시 임시정부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다보니 구체적인 내용 선정 및 서술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는 3·1운동을 기점으로 여러 곳에 세워진 임시정부들을 완전하게 통합하고 대표성을 갖추었느냐하는 것이다. 학계 연구는 불완전한 통합이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들은 완전한 통합이었다고 서술하면서 임정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둘째는 독립운동사상 최대 회의였던 국민대표회의와 임정이다. 수립 초반부터 대표성에 한계를 갖던 임정이 192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하자 지금까지의 독립운동 과정을 평

가, 반성하고 임정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회의는 임정 존폐를 둘러싼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고 여기에 임정 옹호파가 회의 결렬에 한 몫을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는 임정 침체기의 결정적 계기라는 이유로 국민대표회의의 의미를 축소 서술하였으며 회의 결렬 이후에도 임정이 여전히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술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I. 서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으로 표출된 독립에 대한 민족의 열망을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한성정부, 노령 대한국민의회와 통합 논의를 거쳐 출범한 임시정부가 1920년대에 들어와 위기를 맞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의 결렬로 임정은 통합정부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받았으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뒤이어 관내에서 진행된 독립운동계 통합 움직임인 민족유일당 운동을 기회로 삼아 임정은 다시 그 위치를 굳건히 하려고 하나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임시정부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출발점은 1969년 동아일보사의 『3·1운동 50주년 기념논문집』이다.¹⁾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펼친 활발한 자료 조사와 편찬 작업과 독립 운동사를 전문으로 삼는 학회들의 설립으로 임시정부 사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하지만 분단과 냉전논리로 임시정부 사 연구는 불완전하게 진행되었었다. 게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 독재정권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내걸었으며²⁾ 1972년 10월 유신 후에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였다.³⁾ 박정희 정부는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1974년부터 시행된 제 3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이전 교육 과정기에 국정과 검정을 병행하던 정책은 국정을 위주로 하는 교과서 정책으로 바뀌어

1)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19쪽

2) 김희곤, 위의 책, 18쪽

3) 문찬영,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서술 추이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쪽

국사 교과서는 국정이 되었으며 국사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사회과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교과가 되었다. 따라서 교과서 내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의 비중은 대폭 증가하는데, 증가된 내용 대부분은 임시정부의 정체성과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미화와 과장 또는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었다.⁴⁾

국내학계에서 임시정부 사 인식과 서술에 대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부터였다. 그동안의 임정 법통론에 입각한 임시정부 사 인식에 여러 연구자들의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 신춘식은 1920-30년대 접어들면서 임시정부는 그 활동이 극히 미약하였고 독립운동사에서 보수적 분파집단으로 낙오되어 갔다고 보았다.⁵⁾ 노경채도 임시정부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지도 못했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지도 못해서 각 민족운동세력을 총영도하는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⁶⁾

이러한 비판적 인식은 교과서에서의 임시정부 사 서술에도 차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⁷⁾ 그러나 6차 교육과정기까지 국사 교과서는 ‘민족사적 정통성’, ‘유일한 정통정부’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임정 법통론에 입각한 임시정부관을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내었다.⁸⁾

그렇기에 교과서의 임시정부 사 서술을 분석한 논문들은 임시정부 법통론을 비판하면서 과연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전 기간 내내 구심점 역할을 하였는가, 연통제와 교통국에 대한 과장된 서술, 국민대표회의의 축소 서술, 침체기였던 1930년대 이후의 임정 활동에 대한 축소 서술, 광복군 활

4) 문찬영, 위의 논문, 5쪽

박근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32쪽

5) 신춘식, 「상해임시정부 인식에 문제있다」, 『역사비평』 봄호, 1988

6) 노경채, 「‘임시정부’는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였나」 『역사비평』 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208쪽

7)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韓國史研究』 157, 2002

8) 문찬영, 위의 논문, 65쪽

동의 과장 서술 등을 꾸준히 지적하여 왔다.⁹⁾

검인정제도가 적용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독립운동 서술 단원에서 임시정부를 독립된 소재목 하에 서술하고 있다. 6종 교과서 모두 상해임시정부 수립→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임시정부 조직과 활동→국민대표회의와 결렬→김구와 한인 애국단→중경 시대와 대한 광복군 순으로 서술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 따르면 임시정부 법통론에 대해서는 이전의 국정 국사 교과서에 비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많이 줄어들었다.¹⁰⁾ 그러나 임시정부 법통론의 여파는 여전히 몇몇 교과서에 지속되는 것처럼 보인다.¹¹⁾

본고는 전체 독립운동의 대표기관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관내에서 크게 세 번 일어난 독립운동계 통합 움직임(통합임정 수립, 국민대표회의, 민족유일당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통성을 갖고서 계속 독립운동들의 중추적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점차 걸림돌이 되어갔는가. 그리고 이 부분을 교과서가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 제 7차 검정 한국 근현대사 6종 교과서의 1920년대 임정 관련 서술 내용이 최근의 학술 연구 성과를 얼마나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9) 최선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검토」,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여운용, 「중학교 국사교과서 근대사 서술 부분의 분석적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박근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문찬영,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서술 추이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 문찬영, 위의 논문, 39쪽

11) 대한교과서는 임시정부 서술 단원을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란 헌법 전문의 일부를 서술하면서 시작하였다.(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6, 162쪽)

전반부에는 6종 교과서의 임시정부 관련 서술내용을 보고자 하였으며 후반부는 노령 대한 국민의회와의 통합과정, 국민대표회의와 임시정부,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임시정부를 전체 독립운동사 내에서 바라봄으로써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사에서 정확히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II. 1920년대 임시 정부 관련 교과서 서술 내용 비교

7차 교육과정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단원 III.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에 중단원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중단원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에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¹²⁾ 현행 7차 한국 근현대 교과서는 6종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각각의 출판사와 집필진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검정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번호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본고에서의 약칭
①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주진오 외 4인	2006	중앙교육
②	천재교육	김홍수 외 5인	2006	천재교육
③	두산	김광남 외 4인	2006	두산
④	금성출판사	김한중 외 5인	2006	금성
⑤	대한교과서	한철호 외 5인	2006	대한교과서
⑥	법문사	김종수 외 3인	2006	법문사

임시정부의 수립이나 조직 구성 등에 대한 6종 교과서의 전체적인 서술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서술에 들어가면 6종의 교과서에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현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임시정부 서술은 [표 2]에서 볼 수 있듯 중단

12) 중단원인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서 모든 교과서가 소단원 3.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라는 같은 제목 하에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조직, 상해시기의 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원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성립부터 1920년대 말까지의 활동을 서술하였다. 이 성립기부터 1920년대 말까지의 임시정부의 활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시정부 수립과정이며 두 번째는 국민대표회의 개최 시기와 임시정부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서술내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목차

대단원	중단원
I.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1. 근대 사회의 태동 2. 근대 사회의 특성 3. 현대 사회의 이해
II. 근대 사회의 전개	1.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개항 2. 개화 운동과 근대적 개혁의 추진 3. 구국 민족 운동의 전개 4. 개항 이후의 경제와 사회 5. 근대 문물의 수용과 근대 문화의 형성
III. 민족독립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3.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4. 사회·경제적 민족 운동 5. 민족 문화 수호 운동
IV. 현대 사회의 발전	1.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3.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과제 4. 경제 발전과 사회·문화의 변화

1. 임시정부의 수립과정과 통합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과 한 단원에 서술되어 있다. 6종 교과서 모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연관 짓고 있다.

금성, 법문사, 대한교과서, 중앙교육 교과서는 정부 수립 운동은 이미 3·1운동 이전부터 있어왔다고 하였다. 나머지 2종의 교과서들은 3·1운동 직후 국내외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모든 교과서들이 상해 임정, 대한국민의회, 한성정부를 간단히 언급하였는데, 독립운동 통합을 위해서는 이 세 곳의 임시정부는 통합을 이루어야 했다고 강조하였다.

상해 임정과 정부 통합 논의를 한 노령의 대한국민의회에 대해서 두산과 천재교육은 “전로한족중앙회가 대한국민의회로 확대 개편된 것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나머지 4종의 교과서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여 정부 형태를 갖추었다”고 서술하였다.¹³⁾

임시 정부 통합 과정에서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의 대한국민의회는 통합 임정의 위치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다가 1919년 5월에 양 측은 기존의 모든 정부를 해체하고 한성정부를 봉대하며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해로 한다는 5개 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국민의회 측이 상해에 와서 본 임시정부의 조직 상황은 합의안과는 달라서 상해임정과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은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¹⁴⁾

통합 임정의 위치 문제에 대해 대한교과서와 중앙교육은 상해는 조계 지역이 많아서 외교 활동에 유리했고 간도나 연해주는 우리 동포가 많이 살며 무장투쟁이 유리했기에 서로 각자의 위치에 통합 임정을 두자고 논의했다고 서술하였다. 그 중 중앙교육은 다음과 같이 본문 밑의 읽기 자

13)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2006, 186쪽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6, 172쪽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6, 162쪽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6, 177쪽

14)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정부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집, 1988

료에 “상하이나 만주나”란 제목으로 외교론자들과 무장투쟁론자들의 주장들을 더 상세히 설명하였다.

상하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대체로 외교 노선을 선호하였다. 당시 일본이 매우 강성하였기 때문에 무장투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선호한 것이다.....(중략).....만주나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해오던 무장 투쟁과는 열강에 의존하는 듯한 상하이 독립 운동가들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다. 이들의 입장에서 상하이는 조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가 많이 사는 만주 지역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포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¹⁵⁾

법문사는 대한 국민의회는 무장투쟁에 유리한 간도나 연해주를, 상해 정부는 외교 활동에 유리한 상해를 주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자료 읽기에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제목으로 박은식의 <한국 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을 실었다. 여기에는 중국 만주 지역, 노령, 미주가 각각 안전지대가 아니며 본국에서 너무 멀다는 단점을 들고 “오직 중국의 상하이만이 동양의 교통의 요지이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쓰여 있어서 학생들에게 상해가 여러 독립운동 지역들 중에서 최선의 곳이었다고 학습시키고 있다.¹⁶⁾ 금성은 위치 문제는 독립운동 방법론과 맞물렸으며 외교론은 상하이를 주장하고, 독립전쟁 중시 세력은 이를 반대하였다고 본문에서는 간략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활동 04’에 안창호의 임시정부 상하이 통합안과 문창범의 통합 반대안을 실어서 좀 더 자세한 이해를 도왔다. 천재교육과 두산은 통합정부 위치를 둘러싼 논란은 서술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통합논의 과정이 있었다”로만 하였다.

15)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6, 189쪽

16)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6, 169쪽

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해 법문사와 대한교과서는 빠른 통합이 이루어져서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임시정부가 상해에 수립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중앙교육과 두산은 통합을 모색하여 통합정부가 출범하였다고만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금성은 연해주의 이동휘 등 일부 세력이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¹⁷⁾라고 하여 대한국민의회가 아니라 한인사회당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했음을 간접 표현하였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전체가 아니라 왜 일부 세력만이 통합 임정에 합류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천재교육은 다른 4종의 교과서처럼 본문에서는 “세 곳의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통합을 이루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학습 도움글>로 제시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과정과 배경”이다. 여기에는 연해주 정부와 상해 정부 사이에 단일정부 수립 원칙이 확정되었으며 임정 측의 안창호와 대한국민회의 측의 원세훈의 5개 안 합의점을 서술하여 내용에 풍부함을 더해주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승인·개조 분쟁을 교과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언급함으로써 대한국민의회 전체가 통합 임정에 참여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통합 원칙에 따라 대한국민의회는 해산을 선언하였으나, 상하이 정부는 각료만을 한성 정부의 각료로 바꾸고 임시 의정원은 해산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상하이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국민의회의 일부 세력을 끌어들이고, 한성 정부의 각료 명단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일 정부의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되었다.¹⁸⁾

17) 금성출판사는 “연해주의 이동휘 등 일부 세력이 상하이 의정원에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로 서술하였다.(김한중 외, 앞의 책, 177쪽)

18) 김홍수 외, 앞의 책, 187쪽

그러나 천재교육도 일부 세력만이 합류했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에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임정의 통합과정은 앞으로 좀 더 명확히 서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2. 국민대표회의와 민족유일당 운동

임시정부는 창립 초기부터 외교활동 실패, 이승만을 둘러싼 임정 내 갈등, 연통제 등의 국내 조직 붕괴, 외부의 반 임정세력 등으로 곧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1921년 초부터 국민대표회의 소집이 요구되었다.

모든 교과서는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 청원서 제출, 구미 위원부 활동, 그 외 여러 국제회의 등의 언급으로 임정의 외교활동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금성을 제외한 5종의 교과서는 “적극적 외교활동”, “강한 열망을 전달하였다”라는 표현을 써서 외교활동을 강조하였다.

그 5종 교과서 중에 대한교과서와 범문사 교과서는 외교활동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지만 천재교육, 두산, 중앙교육 교과서는 외교활동의 실패는 언급하지 않았다. 금성 교과서는 앞의 교과서들과는 서술 경향이 다르다.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각종 국제 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였고 그 바로 뒤에 외교 활동은 성과가 없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강대국들이 개최한 국제회의는 일본이 전승국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서술로 외교론의 한계점도 설명하였다.¹⁹⁾

금성은 이렇게 임정이 주력시하던 외교활동을 실패하자 임정에 비판적

19) 김한중 외, 앞의 책, 178~179쪽

이던 신채호 등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세력들이 전선 통일과 독립운동 방향 전환을 위해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서기>에 “국민대표회의 소집”이란 제목을 붙여서 신채호, 박용만 등 독립 전쟁론자들이 베이징에서 군사통일주비회를 열어 대표회의 소집과 강력한 신정부의 수립을 요구했다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나머지 5종의 교과서는 독립운동 방략을 둘러싼 의견 대립 뿐 아니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연통제와 교통국의 붕괴를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배경으로 들었다. 여기에 천재교육과 두산은 사회주의 사상 유입으로 인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 간 갈등 증폭으로 임정이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고 서술을 덧붙였다.²⁰⁾

당시 임정 내에서는 위임통치청원, 미주 재정권 관할 문제 등으로 이승만을 둘러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승만을 둘러싼 임정 내 갈등을 언급한 교과서는 대한교과서, 천재교육, 금성이다. 대한 교과서는 이승만이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이에 무장 투쟁을 주장하던 국무총리 이동휘가 탈퇴함에 따라 임정 내에서 의견 대립이 생겼다고 서술하고 있다.²¹⁾ 금성은 <한 걸음 더 다가서기>에서 외교 활동이 벽에 부딪히자 임시 정부 내의 대립이 표면화되었고 임시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는 독립 운동가들을 분노시켰다고 서술하였다. 천재 교과서는 <역사 자료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이란 제목으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와 그에 대한 대통령 탄핵 주문을 실음으로써 이승만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임정 내에 분열이 있었다고 가장 명확하고 자세히 밝히고 있다.²²⁾ 그

20) 김광남 외, 앞의 책, 176쪽; 김홍수 외, 앞의 책, 190쪽; 한철호 외, 앞의 책, 164쪽; 주진오 외, 앞의 책, 192쪽; 김종수 외, 앞의 책, 172쪽;

21) 한철호 외, 앞의 책, 164쪽

22) 김홍수 외, 앞의 책, 187쪽

외 나머지 교과서는 이승만 문제를 서술하지 않았다.

임정 외부의 반(反) 임정 세력들에 대해서는 금성만이 언급하였다. 금성은 언급했듯이 본문에 “임정에 비판적이던 신채호 등 중국 관내 세력과 만주, 연해주 등지의 무장 세력들”이라고 서술하였다.²³⁾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인 국민대표회의는 초반부터 임정 존재를 둘러싸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분열, 대립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가 개최를 주장하고 또 회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법문사는 임시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었다.²⁴⁾ 4종의 교과서(두산, 중앙교육, 천재교육, 대한 교과서)는 회의개최를 주장한 사람들을 “국내외 독립 운동가”들로만 서술하였다. 금성은 <한걸음 다가가기>에 상해, 만주 등의 회의 추진인사들의 이름과 함께 국내, 중국 관내, 연해주, 미주 등지의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들이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다고 가장 상세히 서술하여서 이 회의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한 곳에 모인 최대의 회의였음을 암시하였다. 또한 금성 교과서는 국민대표회의는 이때까지의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 반성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토론하였다고 설명함으로써 회의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6종 교과서 모두 국민대표회의의 창조파와 개조파를 언급하였는데 “임시 정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와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창조파가 있었다”의 서술로만 끝내고 있다. 개조파와 창조파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주장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교과서는 없다.

5개월간의 회의를 한 끝에 창조파와 개조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회의의 결렬로 임정은 대표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후 정국을 쇄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23) 김한중 외, 앞의 책, 179쪽

24) “이에 임시정부는 조직을 개편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김중수 외, 앞의 책, 172쪽)

회의 결렬 이후에 범문사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정을 이탈하고 임정 내부 대립도 심화되었으나 수차례 개헌으로 체제 정비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였다. 중앙교육 교과서도 독립운동가들의 임정 이탈로 임정은 더욱 위축되고 독립운동 중추기관으로 차질이 생겼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정은 국무령 체제 개편, 국무위원 중심 집단 지도체제로 바뀌었다고 서술하였다. 두산과 대한은 임정이 큰 타격을 받았으나 이동녕, 김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다시 정비되었다는 서술로 이 단원을 끝맺었다.

금성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위의 교과서들과는 다르게 서술하였다. 천재교육은 회의 이후 임정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 상태에 빠졌으며 자체적 활로를 모색하여 1925년 이승만 탄핵 파면하고, 국무령제로 헌법을 개정하였지만 내각을 조직하기 힘들 정도로 침체되었다는 서술로 중단원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마치고 있다.²⁵⁾

금성도 회의 이후의 임정에 대한 서술 내용은 천재교육과 같으나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과 임시정부의 기능 상실로 관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설명을 더 추가하였다.²⁶⁾

회의 결렬로 임정은 대표성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하였다. 그렇기에 1920년대 중반에 관내에서 ‘민족유일당’운동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통합 논의가 다시 일어났을 때 임정은 그 운동의 중점에 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정은 민족유일당 운동을 침체된 임정의 위상을 다시 살릴 기회로 보고 1927년에 이당치국의 형태를 도입한 제 3차 개헌을 하였다.²⁷⁾

전체 독립운동계의 동향 속에서 임정을 가르치려면 독립 운동 통합 움직임 중 하나인 민족유일당 운동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교과서 상에서 민족유일당 운동 서술은 다음 단원인 4. “사회·경

25) 김홍수 외, 앞의 책, 187쪽

26) 김한중 외, 앞의 책, 179쪽

27) 김희곤 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역사강좌, 1995, 19쪽

제적 민족 독립운동전개”에서 서술되며, 모든 교과서들은 중국 관내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는 “자치론에 대항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양 진영에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서술로만 끝내고 있다.

Ⅲ.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

1.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

1919년 3·1 운동 직후에 선언되거나 조직된 임시 정부 중에서 4월 13일에 선포된 상해 임정은 당시로서는 여러 임정 중의 하나였기에 독립 운동 단체들을 대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 통합이 상해 임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상해 임정과 정부 통합 논의를 한 대한국민의회는 주요 해외 독립운동기지 중에 하나인 노령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연해주 지역은 국내와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1920년대 전후해서는 20만이 넘는 한인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독립 운동가들도 이곳에서 항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²⁸⁾

연해주의 독립 운동은 1차 대전의 종결과 파리 강화회의, 그에 따른 국내와 해외 각지 독립운동 세력과 상호 연락을 배경으로 활기를 찾았다. 1919년 2월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중심으로 ‘전로국내조선인회의’가 개최되어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 문제를 비롯한 독립운동 전반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와 함께 이를 추진할 주체로 ‘대한국민의회 조직’ 등의 문제도 협의하게 되었다.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 명의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함으로써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고 대외, 대내적인 문제와 외교를 관장할 의장에는 문창범이 선출되었다.²⁹⁾ 그런데 대한국민의회 내부에서

28)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의 성립과 조직」, 『한국학보』, 1987, 128쪽

29)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 (이배용, 「임시정부 통합운동」)

는 출생지역, 정치이념, 독립운동의 방법론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일찍부터 노령에 거주하면서 러시아화한 최재형, 문창범, 한용현 등의 귀화 한인은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가 비교적 적었으며,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 반면 한일 합방을 전후로 하여 이주해 온 세력인 비 귀화인은 친 볼셰비키 노선을 취하면서도 민족의식과 항일의식이 강하여서³⁰⁾ 상해 임시정부에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들이 이동휘로 대표되는 한인사회당 세력이었다.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미흡하다. 대한국민의회는 상해 임정과 통합 논의를 한 주체이며, 대한국민의회 내의 갈등은 후의 통합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교과서에서는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서술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정의 통합론은 파리강화회의 이후에 10월 개최 예정인 워싱턴 국제연맹회의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³¹⁾ 그리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는 1919년 5월에 대한국민의회가 교섭 특사로 원세훈을 상해에 파견하고 5월 25일에 상해 임정의 내무총장으로 선출된 안창호가 상해에 도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양 측은 통합임시국회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두고 독립운동 노선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해 임시정부 측은 상해가 교통의 요지이며 프랑스 조계이기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점을 들었다. 반면 노령 측은 노령에 한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와도 교통 연락이 편리하여 한인의 조종에 이익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³²⁾ 이러한 양 측의 주장을

30) 반병률, 「한인사회당의 조직과 활동(1918~1920)」, 『한국학연구』 5, 1993, 136쪽

31)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정부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집, 1988, 103쪽

32)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이배용, 「임시정부 통합운동」)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는 대한 교과서와 중앙교육 뿐이다. 그 외의 교과서들은 아예 서술하지 않거나 간략히 서술하였다. 그 중 범문사는 밑의 자료에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나온 상해에 임정을 세우게 된 경위를 비중 있게 인용함으로써 상해 독립운동가들의 외교론이 당시 상황에서는 더 적합했다고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교과서는 상해 임정과 대한국민의회의 각자의 주장과 그 근거를 실어서 외교론과 독립전쟁론에 대해서 학생들이 균형 있게 생각 해 볼 수 있게 하며, 통합정부 수립 논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분분하던 가운데 안창호는 상반된 주장을 수습할 의도로 통합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의 위치는 상해로 두되, 상해 임시정부의 의정원과 대한국민의회를 일체 해산하고 한성정부를 계승하여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대한국민의회는 여기에 만장일치로 해산을 선포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와 대한국민의회의 통합이 성공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대한국민의회의 문창범 등 노령인사들이 상해로 오면서 상해 임정은 승인·개조 논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통합 약속은 대한국민의회와 상해 의정원을 모두 해산하고 13도 대표가 한성 정부를 봉대하여 신 국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의정원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으며 임시헌법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켜서 상해 임시정부를 개조한 것이었다.³³⁾

문창범은 상해 임정의 개조가 한성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고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교통총장 취임을 거부하고는 북경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가 대한국민의회를 재건하였다. 이는 상해 임시정

33) 반병률, 앞의 논문, 109쪽

부와 대한국민의회의 완전한 통합이 사실상 결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 사회당의 이동휘는 “임시정부가 통합의 원칙은 어겼으나 이것이 독립운동의 성패를 판가름할 결정적 문제가 아니기에 광복의 대국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1919년 11월에 통합정부의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³⁴⁾ 비록 대한국민의회 전 세력이 아니지만 한인사회당이 합류한 것은 통합 정부로서의 권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 한인사회당의 합류는 노령, 간도의 주요 독립운동세력들이 임시정부 승인을 직, 간접적으로 표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상해임정은 훨씬 강화된 대내외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³⁵⁾

현 근현대사 교과서는 상해 임시정부와 노령 대한국민의회의 통합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면서 금성과 천재교육을 제외한 4종의 교과서가 대한국민의회가 통합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임정이 출범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특히 법문사와 대한교과서는 “한성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국민의회를 통합한 상해 임정”이라고 서술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한국민의회가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임시정부가 순조로이 세 곳의 정부를 통합하여 정통성과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고 학생들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은 이후 대한국민의회가 재건되어 활동했다는 것과 이것이 이후의 임시정부에 끼친 영향을 전혀 서술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져온다. 비록 한인 사회당 이동휘의 합류로 임정은 통합의 명분은 살렸지만 대한국민의회와의 완전한 통합이 결렬된 것은 상해 임정이 모든 독립 운동을 아우르는 최고 기관이라는 명분에 한계를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이후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대한국민의회 세력은 반 임정을 주장하는 신채호의 북경 세력과 손을 잡고 국민대표

34)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상, 국가보훈처, 1999(이배용, 「임시정부 통합운동」)

35) 반병률, 앞의 논문, 128쪽

회의 시기의 창조과를 형성하였다. 그렇기에 양측이 완전히 통합하였다는 교과서 서술에 따르면 창조과에 대한 설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성과 천재교육은 실제 통합 결과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다. 금성의 경우는 “연해주의 이동회 등 일부 세력이 상하이 의정원에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되었다”³⁶⁾라고 서술하여 대한국민의회가 아니라 한인사회당 세력이 임시정부에 참여했음을 간접 표현하였다. 천재교육도 <학습 도움글>에 임시정부는 대한국민의회 ‘일부 세력’을 끌어들이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금성 교과서는 상해 임정의 승인개조 문제를 서술하지 않아서 임정이 왜 ‘이동회 등의 일부 세력이 합류하는 형태’로 통합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들 중 천재교육만이 승인개조 문제를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러나 천재교육과 금성교과서는 문창범이 임정 통합을 거부했음에도 이동회 세력은 임정 통합에 참여한 이유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 대한국민의회에 대한 현행 교과서들의 서술이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국민의회 내의 문창범 세력과 이동회 세력의 입장 차이를 서술하지 않았기에 교과서들은 상해 임정이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안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이동회 세력이 임정 통합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성과 천재교육 교과서는 ‘일부 세력’이라고 할 뿐 한인사회당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친 볼셰비키의 사회주의 세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한인 사회당이 임시정부에 합류함으로써 임정의 권위와 대표성을 강화시켜서 기타 독립운동세력들의 임시정

36) 김한중 외, 앞의 책, 177쪽

부 승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국민대표회의의 결렬과 민족유일당 운동

상해 임시정부는 1920년을 지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주력하던 외교 활동은 한계에 부딪혔으며 교통국과 연통제의 붕괴로 국내의 인적, 물적 자원은 줄어들었다. 또한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미주 재정권 관할 문제, 독단적인 외교노선 등을 두고 대립이 있었으며 임정 외부에서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하며 반(反)임정 노선을 취하던 북경 세력을 중심으로 반 임정 세력들이 커져가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21년 상해에서 박은식, 원세훈 등은 “우리 동포에게 고함”으로 국민 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임정 요인인 안창호, 여운형은 임정이 수립되던 당시부터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제도 등도 독립 운동 계 ‘현실’에 맞지 않게 조직되어서 ‘현재의 임정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³⁷⁾ 하지만 임정 내부에서는 회의 소집을 놓고 이승만 계 인사 45인은 대통령제 고수를 주장하며 임정 절대유지를 선언하였다. 임정 고수파의 입장은 국민대표회의 기간 내내 문제점으로 자리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임정의 외교활동을 미화하고 있으며³⁸⁾ 친재교육, 두산, 중앙교육처럼 그 실패를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임정의 외교노

37)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201쪽

38) 임정의 외교활동의 서술 미화는 이전 국사 교과서에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전 국사 교과서에서 외교활동에 대한 모호하고 미화된 표현이라고 지적된 ‘강한 독립열망 전달’을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5종 근현대사 교과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문찬영,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서술 추이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선은 수립 초기부터 무장 투쟁론자들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렇기에 외교 활동 실패는 임정의 입지를 흔들었고 신채호 등은 1920년 9월에 북경의 군사통일주비회를 결성하여 반임정 운동을 전개하며 무장 투쟁을 주장하였다. 외교론의 한계점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언급한 교과서는 금성뿐이었다. 그리고 금성은 임정의 외교활동의 의의에 대한 간단한 서술 뒤에 외교활동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주변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따라서 국민대표회의 개최의 제안이 있었음을 설명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외교활동을 독립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게 도왔다.

또 당시에 사회주의 사상은 아직은 태동기였기에 이념 분열이 본격화되기 전이다. 이념 차이보다는 독립운동 방법론과 임정 입장 차이였던 것이다.³⁹⁾ 그러나 천재교육과 두산은 양 진영의 이념 갈등이 임정 위기의 한 원인이었던 것처럼 서술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분열을 일삼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⁴⁰⁾

이승만을 둘러싼 임정 내 분열에 대해서 3종 교과서(대한교과서, 천재교육, 금성)만이 언급하였다. 당시 임정 내부의 반이승만 세력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개조파를 형성했으며 회의를 계기삼아 이승만을 탄핵하고 정국을 쇄신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회의 이후의 이승만 탄핵 사실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3종 교과서 외의 다른 교과서들은 이승만과 임정 내부 문제 서술을 아예 빼버렸으며 중앙교육의 경우는 오히려 뒷부분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난 후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임정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승만도 도미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이승만이 그간 중국에서 계속 머무르며 집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것으로

39) 윤대원, 앞의 책, 204쪽

40)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韓國史研究』 147, 2002

오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승만 문제를 언급한 교과서들도 그의 위임통치청원서 문제만을 주로 언급하였다. 천재교육의 경우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분열’이란 제목의 <역사 자료실>에 인용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 주문’에 이승만이 오랜 기간 직무지를 떠나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짧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 아래의 사료 해설란에는 위임통치청원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직무지를 오래 비운 사실이나 미주 재정권 관할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⁴¹⁾ 그가 계속 미국에 있으면서 임정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나 미주 재정권 관할 문제와 관련된 실정 등은 앞으로의 교과서에서 보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민대표회의는 자금이나 각지 대표 선출 문제 등으로 소집이 계속 연기되어 1923년 1월에야 열리게 되었다. 이 국민대표회의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125명의 대표들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의 독립 운동가들이 5개월 동안 대거 참여한,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회의였다.

회의는 군사, 재정, 외교, 생계, 노동 문제 등 모두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운동계 통일 방안과 활동방안을 논의하였다.⁴²⁾ 그 중 주요 논쟁은 임시 정부의 존폐에 관한 것이었다. 창조파는 임정의 외교독립론과 준비론에 반대하면서 독립전쟁론을 주장하던 북경 중심의 민족주의 세력과 임정으로의 정부 통합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던 국민대표회의 세력이 중심이 된 이르쿠츠크파 고려 공산당이 주축이 되었다. 개조파에는 민족주의 진영 측에서는 상해 중심 세력과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한족회, 사회주의 진영 측에서는 정부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찍부터 민족주의 진영과 연합을 꾀한 이동회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참여하

41) 김홍수 외, 앞의 책, 192쪽

42)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 연구』, 지식산업사, 2004, 68쪽

였다.⁴³⁾ 창조파는 상해에서 수립된 임정은 현 임정으로는 분열된 독립 운동을 통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개조파는 수립 과정에서부터 임정 대표성에는 문제가 있으나 시기의 불가피성이라 주장하며 정부를 개조하여 부족한 점을 대표회의에서 보완하고자 하였다.⁴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근현대 교과서들이 임시 정부 통합 과정에서 노령 대한국민의회 측이 상해 임정과 완전히 통합하였다고 서술함으로써 창조파를 형성한 세력들이 누구인지, 왜 임정을 불신임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창조파와 개조파 양 측이 임정의 대표성에 한계점이 있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인식하였던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임정을 둘러싸고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 속에서 개조파까지 임시정부 전복의 음모로 본 임정 내 고수파의 협상 거부로 회의는 난항을 겪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정 내부에서는 개조파와 고수파 간의 분쟁은 계속되었는데, 임시정부를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유지시키고자 했던 고수파가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았던 점은 회의 결렬의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⁴⁵⁾ 그러나 모든 교과서는 임정 고수파를 아예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대표회의를 두고 임정 내에서 내내 의견대립이 있었음을 설명할 수 없게 하였다. 또 회의 결렬 원인에는 임정 고수파도 한 몫을 하였는데도 교과서들은 결렬 원인을 창조, 개조파의 대립으로만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상해 임정만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 고수파의 주장이 독립운동의 통합 움직임인 국민대표회의에서 사실상 저해 세력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

43) 윤대원, 앞의 책, 203쪽

44) 윤대원, 앞의 책 201쪽

45)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이명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까 생각된다. 두산과 대한교과서의 경우, 임정 고수파에 속했던 김구와 이 동녕이 회의 결렬 이후에 임정을 재정비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했다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결렬로 끝나고, 임시정부는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채 국민대표회의도 성공시키지 못함으로써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정부라는 명목을 잃고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국내외 거의 모든 단체들이 모인 독립운동사상 최대 회의였음에도 교과서들은 창조파와 개조파에 어떠한 독립운동세력들이 참여했는지 서술하지 않았다. 이는 창조, 개조 양 진영에 이르쿠츠크 파 고려 공산당과 상해파 고려 공산당이란 공산주의 세력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국민대표회의의 축소 서술은 그 이전의 교육과정기에서도 내내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었다.⁴⁶⁾ 이 점은 7차 교육과정에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듯이 보인다. 국민대표회의를 독립운동사상 최대 회의라고 명확히 서술한 교과서는 없으며 그나마 금성이 <한걸음 다가가기>에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들이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으며 회의는 이때까지의 독립운동 과정을 평가, 반성하는 한편 임시정부의 나아갈 방향을 놓고 토론하였다고 가장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축소 서술은 국민대표회의 결렬이 임정 침체기의 결정적 계기였기에 교과서는 임정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된 대표회의의 의미를 축소하고자 해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회의 결렬 이후에 임정은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정국쇄신 운동을 펴기도 했지만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것은 금성과 천

46) 4차, 5차 교육과정기에는 ‘소집되었다’로 간략히 서술되었고 6차 교육과정에는 본문내용에 서술이 빠져 있다.(박근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4~25쪽)

재교육만이 서술하였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체제 정비에 힘썼다고 씀으로써 임정이 여전히 독립운동 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하지만 이는 임정 정통론에 입각한 것으로⁴⁷⁾ 여전히 정통론이 교과서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임정이 독립운동 세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치가 크게 손상되었어도 다른 독립운동들도 침체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중 후반에 독립 운동계에는 좌우합작 운동으로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민족 독립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당조직이나 대당체를 조직해서 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자는 취지였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대표기구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1920년대에 들어와 임시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 가치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1923년에 1월에 열린 독립운동사상 최대 회의인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됨으로써 임시정부의 권위는 크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임정 측으로선 자신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독립 운동계를 통일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⁴⁸⁾

1926년 10월에 대독립당조직북경축성회(이후 북경축성회)가 창립되면서 안창호와 원세훈 사이에 대 독립당을 결성하여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휘부로 삼기로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고서 민족유일당 운동은 순조로운 진전을 보게 되었다. 여기에 임시정부 측은 1927년에 ‘이당치국’의 형태를 도입한 3차 개헌을 하는 등 민족유일당 운동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임정해체론의 철회 또는 유보를 조건부로 창조파의 ‘당적 결합’론을 수용하는 것이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크게 타격받은 임시정부 조직과 위상을 재

47) 신춘식, 「상해임시정부 인식에 문제있다」, 『역사비평』 봄호, 1988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韓國史研究』 157, 2002

48) 김희곤 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역사강좌, 1995, 10쪽

정비 할 수 있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⁴⁹⁾

교과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을 다음의 중단원 4. “사회·경제적 민족 독립 운동전개”에서 언급하며 자치론에 대항하고 이념 간 분열과 대립을 막는 단일화된 민족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민족유일당을 결성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서술하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중국 관내에서 좌우합작의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면, 앞 단원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라고 배운 임정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그리고 임정이 여전히 존속해 있는데도 왜 민족유일당 운동 부문에는 임정관련 서술이 빠져 있는가?’의 의문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금성출판사의 서술이 설명해 준다고 생각한다. 금성 교과서는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 임정이 침체기를 맞았다고 하면서 다른 교과서들과 달리 민족유일당 운동도 중단원 2.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언급하였다. 독립운동 세력의 분열과 임시정부의 기능 상실로 관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설명을 추가하였던 것이다.

49) 한국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김영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민족 유일당 운동」)

IV. 결 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수립된 뒤 1945년까지 중국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 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쌓여왔다.

상해시기 임시정부는 독립운동들 중에서 유일하게 중단원 하나를 차지함으로써 여타 다른 운동들보다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풍부하게 다뤄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 서술에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지목하고 싶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해 임정 통합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학계에서는 이미 상해 임정이 노령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에 실패했음을 밝혔음에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완전하게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시킬 뿐 아니라 이후 국민대표회의까지 이어져서 창조파와 관련된 서술을 명확히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로 남게 된다.

둘째는 국민대표회의에 관한 것이다. 임정 내부는 회의를 찬성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두고 갈등을 겪었으나 교과서들은 이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 또한 창조파와 개조파의 논쟁도 간략하게 서술하고 지나가며 회의 결렬 이후의 임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과서는 임정이 재정비되어서 다시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처럼 서술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사에서 국민대표회의의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는 다소 소략하게 서술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 침체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 역시 지나치게 임시정부를 중시하다보니 이같이 축소서술

된 것이다.

현행 7차 교과서는 과거 임시정부 정통론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정통성’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교과서는 거의 없으며 금성이나 천재교육과 같은 몇몇 교과서의 경우는 학계가 일방향적인 임시정부 사 인식과 서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부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서술을 보면 여전히 임정 정통론의 여파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서술에 검인정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임정 정통성을 명시하는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검정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어⁵⁰⁾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임정을 지나치게 중시하려는 시각은 전체 독립운동사와 통합 움직임 속에서 임정이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어떠한 위상을 가졌는지를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역사는 실제로 가까운 때의 모습일수록 보다 생생하게 우리의 가슴에 전달된다고 하였다.⁵¹⁾ 8차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사를 전체적으로 조명한다는 시각으로 교과서를 서술하여,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개방적이고 발전적이며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줘야 한다.

50) 교육인적자원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기준』, 2001, 2쪽

51)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韓國史研究』 155, 2002

참 고 문 헌

1. 교과서 및 연계도서

a. 교과서

- 김광남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두산, 2006
주진오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6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6
김홍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천재교육 교과서, 2006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대한교과서, 2006
김종수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법문사, 2006

b. 교과서 연계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4.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지도서』, 두산, 200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공청회』, 2005

2. 연 구 논 저

- 강만길,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출판부, 2004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독립운동사』 1~5, 탐구당, 1965-1969
『한민족독립운동사』 6~10, 1989~1991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중국관내한국독립운동단체연구』, 지식산업사, 1995
김희곤·한상복 등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 윤대원, 『상해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삼십년사』, 국회자료원, 1999
- 이영효·김한중, 「비관적 역사읽기와 역사쓰기」,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도서출판 책과 함께, 2006
-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한국 근현대사학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상하), 국가보훈처, 1999

3. 논 문

- 강영철·최완기 외, 『국사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강만길, 「식민지시대 민족통일전선 운동의 역사적 의의」, 『쟁점 한국근현대사』 4, 1994
- 고정휴, 「세칭 ‘한정정부’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97, 1997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대한 재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13집, 2000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에 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2집, 2005
- 김영범, 「1920년대 후반기의 민족유일당운동에 대한 재검토:중국 관내 지역에서의 경과와 귀 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1, 1994
- 김창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남북한 학계의 인식」, 『상명사학회』, 1995
- 김희곤, 「1920년대 임시정부의 협동전선 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 한울, 1995
- 노경채, 「‘임시정부’는 얼마나 독립운동을 하였나」, 『역사비평』겨울호, 역사문제연구소, 1990
- 문찬영,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서술 추이

- 분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 박근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석」,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윤재, 「1920년대 초 민족통일전선운동과 국민대표회의」, 『학휴』 17, 1997
-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정부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 1986
- 「대한국민의회의 성립과 조직」, 『한국학보』 46, 1987
- 서중석, 「한국교과서의 문제와 전망 :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 연구』 116, 한국사 연구회, 2002
- 신춘식, 「상해임시정부 인식에 문제 있다」, 『역사비평』 봄호, 1988
- 여운용, 「중학교 국사교과서 근대사 서술 부분의 분석적 고찰」,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현주, 「3·1운동 직후 ‘국민대회’와 임시정부 수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 최선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검토」,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Abstract

The analysis of contents about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7th curriculum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extbook

Hye Ju, Park

Major in Histor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will to form a representative body for independence movements triggered by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Six kinds of textbooks about modern history describe this Provisional Government in a separate unite, which forms the highest percentage of independence movement groups.

The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as been researched since the 1970s; with the progress of democratization late in the 1980s, researches were conducted far from the existing one-way viewpoint of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uch researches were reflected on description in textbooks: history textbooks after the fourth curriculum decreased the prior type of description adhering to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ut sill tried to explain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s with the focus placed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uch trial is almost true to description of the Korean modern history

in the current seventh curriculum. The current textbooks about modern history also give excessive stress on the Provisional Government, showing problems in selecting and describing concrete contents.

The first issue is if it merged provisional governments established in several places, with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as its starting point, and represented them. Although academic researches revealed that it was an incomplete merger, textbooks described that it was a complete merger, giving legitimacy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 second issue is related to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ouncil, which was the largest council in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s,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As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at had limitations in representativeness from its early stage of establishment became confronted with many difficulties in the 1920s,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ouncil was held to evaluate and reflect the process of independence movements and discuss the futur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owever, the conference ran into difficultie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creation and reconstruction parties in terms of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extbooks reduced the meaning of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onference because it was the critical cause of stagn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described as if the Provisional Government still played a key role in independence movements even after the breakdown of the conference. These problems ultimately prevent students from getting a clear understanding of what role the Provisional Government played in the hi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s and what it means.